성김 주한 美대사 내정자 부친 'DJ 납치사건 관여' 전력 논란

박지원 "DJ, 부친 문제 별개…문제삼지 말라 지시"

성김〈사진〉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의 부친 김기완(김재권)씨의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가 고(故) 김대중 대통령 납치사건 당시 주일공사로서 사건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김씨가 미국으로 이민 간 것도 이 사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는 당시 김공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납치를 실행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납치 직후에도 그는 'DJ를 절대 죽여서는 안된다'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이 블로그는 전하고 있다.

이 같은 전력 논란 때문에 성김이 지난 2008년 7월 6자회담특사로 임명됐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진영에서는 내부적으로 적절성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에 성김이 미국대사로 내정되자 인터넷 상에 내정자 부친의 전력 의혹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토론방에는 "김대중 납치사건의 일본 총책 아들이 차기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되었다 하네요~! 정말 나라꼬라쥐...제대롭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김대중 선생에게 용서를 구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도덕성의 본류"라는 등의 비판적 글이 올라오고 있다. 물론, "확실하지도 않은 아버지 일 때문에 미 대사가 된 것으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납치사건의 피해자였던 김 전 대통령은 생전에 당시 성김 6자 회담 특사에 대해 "그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거나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2008년께 성 김 특사가 미 국무부 한국과장으로서 6자 회담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할 당시 아버지의 전력이 일부 보도가 돼 보고를 했더니 김 전 대통령은 '그 당시 성 김은 태어났더라도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그 아버지와 성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했으니 미국과 한국을 위해 훌륭한 외교관으로 성공하길 바란다"며 "그런 이야기를 일절 하지 말아라"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박 전 원내대표는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성김이 훌륭한 미국 외교관으로 성공하고 한미관계에도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나아가 "김 전 대통령은 생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연좌제가 적용되어선 안 된다'는 말을 여러번 했다"고 전했다.

최경환 전 비서관도 "당시 인터넷에 그 아버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떠돌아다녀 보고하니 김 전 대통령도 (성김 특사가 김재권씨 아들인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며 "김 전 대통령은 '우리 쪽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집필한 소설가 유시춘씨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김과 부친 문제는 별개로, 밖에 알리지 말라는 게 김 전 대통령의 뜻이었다"며 "김 전 대통령은 남의 자식, 원수의 자식까지 배려하는 분이셨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입장료 일부, 경기장 건립 비용으로 사용해야"

야구장 건립방안 광주시민 공청회

오는 2013년 새로 건설되는 광주야구장의 이름을 기업에 임대, 야구단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입장료의 일부를 야구장 관리 및 정비 비용으로 사용하고,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광주시는 7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야구장 건립방안'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주제발표자와 패널들은 "남녀노소,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태양광·LED 조명, IT기술이 결합한 경기장이 되어야 한다"며 "각종 체육과 문화를 함께 즐기는 복합 체육·문화 공간, 시민이 주인인 야구장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제발표자로 나선 전호문 목포대 체육학과 교수는 '기업에 야구장 명칭사용권을 임대하는 방안과 야구장 입장료의 일부를 경기장 건립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7일 오후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야구장 건립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패널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토론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조희준 KBO 국제부장은 일본 히로시마 야구장과 광주의 추진상황을 비교하며 지자체와 시민, 구단, 지역 경제계의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조 부장은 "일본처럼 구장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경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장 내부 연결통로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아·노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용석, 파티플로어, 장애인석,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눌 수 있는 샌드시트 등도 야구팬을 위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여한 김여울 광주일보 기자는 "적은 돈이라도 많은 시민이 참여해 내 고장 야구장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야구장 2만2000석 좌석에 후원자의 이름을 새기고 특별 이벤트에 초청하는 방안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노사정 '정년 60세 연장' 합의 불발

노사정이 합의를 추진해온 '정년연장'이 무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제79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노사 이견이 커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대신 노사정은 중고령층과 청년층 세대 간에 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중고령 인력의 점진적 고용연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베이비붐 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고용연장 및 촉진은 정년연장, 정년 이후 재고용·재취업·창업 등으로 경로를 다양화하며 임금체계 개편 및 근무형태 다양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상무위는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한 합의문'도 채택했다. /연합뉴스

조계종 "대정부관계 정상화" 선언

지난해 말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이후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국내 최대 불교 종단인 조계종이 7일 대정부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낮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관계 정상화 방침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담화문을 통해 "이제 지난 6개월여 진행해온 대정부 관계를 정상화하고 자성과 쇄신 결사에 집중하고자 한다"면서 "소통 중단과 출입 제한 조치를 해소하고, 전통문화 유산과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 지원 예산 등도 정상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의 대정부관계 정상화 선언은 작년 12월 말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 등이 삭감된 이후 6개월여만이다. /연합뉴스

'광주호 둑 높이기' 광주-담양 여론분열 양상

담양군의회 "계획대로 추진" 광주시의회·환경단체 "반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담양군의회(의장 전정철)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중 하나로 추진중인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광주호의 저수량 확보, 지진을 대비한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수문 설치와 함께 홍수예방은 물론 일부 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며 하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있어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회는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이 저수지 기능보강의 차원을 넘어 광주호가 광주·전남의 새로운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호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호 둑높이기 추진위원회도 사업 당위성을 홍보하는 활동에 나섰다. 추진위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둑 높이기 사업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반대 여론이 많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와 북구의회 등은 시가문화권 훼손을 이유로 둑높이기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또 환경단체들은 '광주호 둑높이기 저지연대'를 만들어 천막농성 등을 벌이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1면 '광주시민 건강'서 계속

하지만 1인당 보건 예산은 4만원(전국 평균 7만5000원)에 불과해 높은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시민 보건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남은 전체 12위를 차지했다. 보건 인프라와 10만명 당 의사 수 등에서 전국 1위 수준이었고, 흡연율과 비만인구비율을 감안한 질병예방 항목에서도 전국 2위였지만 14위에 그친 낮은 건강상태 때문에 순위가 낮았다.

광주에 이어 서울과 대전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강원(16위), 충남(15위), 경북(14위) 등은 다른 시·도에 비해 건강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건강 랭킹'은 건강상태(50%)·질병예방(25%)·의료효율(10%)·의료공급(15%)의 4가지 영역에서 받은 점수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전체 순위를 매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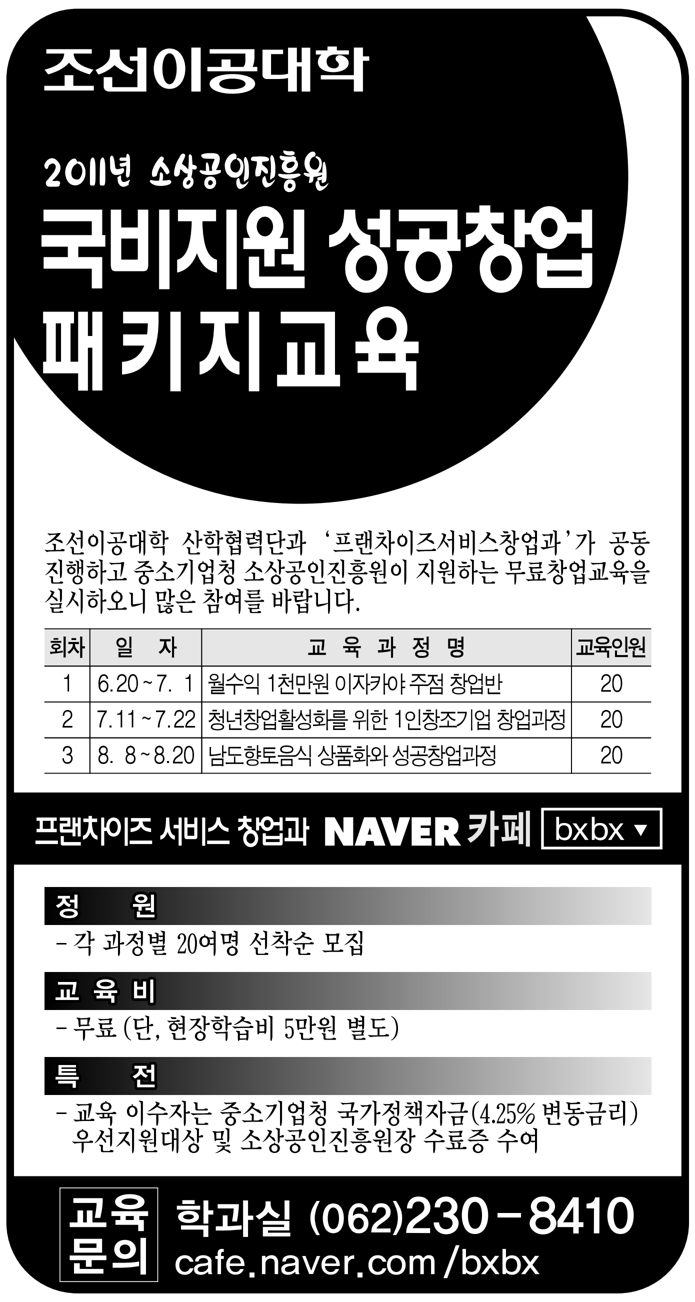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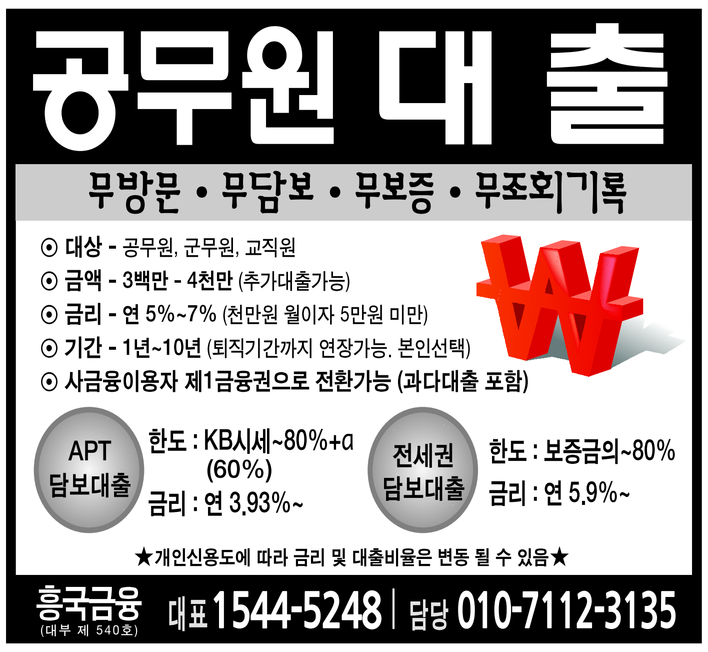
건강상태는 지역민의 기대수명과 6대 암, 고혈압·당뇨 발병률, 건강일수(1년 중 약 먹거나 병원 간 날을 제외한 일수) 등을 조사항목으로 넣었다. 질병예방은 흡연·비만율과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 등이 포함됐다. 의료효율은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 비율, 평균 진료비 등을, 의료공급은 인구 10만명 당 의사·병상 수, 1인당 보건예산 등을 토대로 점수를 산출했다.

뉴스 브리핑

휴대전화 전자파 보호기준, 몸통으로 확대

현재 국내에서 머리에만 적용되는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이 몸통과 팔, 다리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 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전자파에 의한 인체보호를 강화하는 '전자파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진도 풍수해보험법상 '자연재해'

앞으로는 지진과 지진해일도 풍수해보험의 자연재해 항목에 포함된다.

정부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